

**안전충남 2050 비전 수정계획
목표별 전략 및 추진과제**

2019. 12.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목표 1]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 안전문화는 안전에 대해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인식, 가치관의 총체이며, 안전을 일구는 기반임
- 개인은 의식적 학습을 통해 행동 양식을 만들어가고, 체화된 행동의 집합이 장시간 지속될 때 문화로서 정착하게 됨
-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 인지의 둔감함을 극복하기 위해 배움과 훈련을 통해 안전에 대한 배려 수준을 높이고, 이에 맞는 실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안전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목 표	전 략	추진 과제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자율형 안전 활동 기반 구축	안전 불감증 극복을 위한 자발적 도민운동 전개
		안전도민 육성을 위한 안전 교육 강화
		생활안전 위해요소 점검방식 개편
	전면적 생활안전문화 운동 전개	다양한 테마의 생활 운동 실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다각화
	정책과 제도의 안전요소 강화	계획에서 평가까지 안전요소 반영
		정신건강 위해요인 해소

전략 1. 자율형 안전활동 기반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함. 도민, 민간 기업, 지역 안전문화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서로 협력을 통하여 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도민 대상 타운홀 미팅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57%가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응답
- 안전문화는 도민이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인식하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

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 도민 스스로 선진적인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정부별로 개별화된 노력으로 특정 시기 또는 사고 발생 이후 전개되는 교육보다는 안전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성을 갖는 안전문화 정착이 가능함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① 안전불감증 극복을 위한 자발적 도민운동 전개

- 안전불감증은 안전에 대해 둔감하거나 안전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전 무지(無知) 현상임. 안전불감증은 안전문화 형성 초기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성숙한 안전문화의 발전과 지속적인 개선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도민이 참여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매월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시민들이 직접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방식을 마련하고 도민의 참여 및 손쉬운 체험을 통해 안전문화의 의미를 상호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로운 유형의 안전 위협 요인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발하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추진과제② 안전 도민 육성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 안전충남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조(自助) 능력을 갖춘 도민을 양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함
-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구조와 구급할 수 있도록 건강

한 육체와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안전충남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도민은 안전 확보와 재난 상황에서 자신을 구조 및 구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키우고, 안전 및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예측력과 판단력을 갖춰야 함

- 이처럼 도민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재난 발생 초기의 인명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권역별·테마별 안전체험 시설을 확충하여 체험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유아, 학생, 여성, 근로자, 군인 등 교육대상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추진과제③ 생활 안전 위해요소 점검방식 개편

- 생활시설 및 산업시설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자체적인 안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안전에 대해 자율적인 실천이 가능하고 안전요소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점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안전요소는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위험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배제되는 요인으로 이를 확인·분석·검토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둠
- 가정,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 주체별로 시설, 내부,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안전요소를 고려하고 새로운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충청남도는 안전요소의 위험도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위험 대응 요소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안전사고의 심각성 홍보 및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함

전략 2. 전면적 생활안전문화운동 전개

(1)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이를 극복하고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며 문화적 확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면적 안전문화 운동이 필요함.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다각적인 방법과 수단 활용을 통해 안전에 관한 사회적 각성 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 전체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안전에 관한 강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 맞는 안전에 관한 주제를 설정하여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실시해야 함
- 진행시기를 일정하게 협의하여 이슈 제기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며 안전한 사회로 움직이는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동원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함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① 다양한 테마의 생활운동 실시

- 충청남도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 인구 증가, 독거노인 증가, 외국인 인구 증가, 다문화가정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 별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와 다양화,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관련 대상을 중심으로 맞춤형된 다양한 안전교육 개발 및 강화 필요
- ‘충남의 생활안전! 유아기부터 고령기까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유아기 때 안전문화를 내면화한 가치관 정립을 통해 일생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실천이 가능하게 해야 함. 이를 위해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각 유관기관 및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체험시설을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고, 안전교육 시설을 확

충하고 안전교육 아이템 다양화 및 계층별 체험교육 확대, 재난·사고 유형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맞춤형 안전교육모델 개발이 필요함

추진과제②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다각화

- 도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 무지증, 안전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고, 테마별, 주제별, 대상별로 안전문화에 대한 실천과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위험 및 안전 정보의 공개는 도민에게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안에 따라 지역이미지 훼손, 재산권에 대한 악영향 등으로 주민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도민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해야 함

전략 3. 정책과 제도의 안전 요소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위험 요인들이 등장하고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은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임. 거주지역의 안전 요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방관자적인 태도, 무사안일주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함
- 안전요소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 제도의 구축은 도를 중심으로 기초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 강화를 이루어야 함. 지자체별로 집중 또는 단기, 장기적 측면의 활동 차이를 감안하여 인력과 예산의 조정이 필요함
-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 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안전성 평가를 제도화하고 실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선도적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집중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고 도민에게 안전에 대

한 의식 강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① 계획에서 평가까지 안전요소 반영

- 도정의 주요 정책과제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최근에는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보다 근본적인 재난안전 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도정의 모든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에 대한 검토와 감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에 실시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한 안전관련 요소를 강화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유도함
- 도정 전반의 계획 수립 및 작성 시 사전 검토항목에 도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한 검토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제도화 함

추진과제② 정신건강 위해요인 해소

- 자살, 증오범죄 등 원인이 되는 우울증은 물론, 각종 약물과 알코올, 스마트폰, 게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정신건강 위해에 따라 개인의 건강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
- 다양한 중독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과 치유를 위한 활동이 병행되어야 함

[목표 2]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 조성

- 안전한 생활터는 일상 생활공간으로서 삶터, 직업 생활공간으로서 일터, 학습 공간으로서 배움터, 레저와 관광 공간으로서 놀이터를 설정하고, 각 공간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자연적·환경적 위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음
- 지역사회와 구성원, 정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능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예측적이고 과학적이며,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춘 생활공간을 만드는 일은 공간 특성에 맞는 일상적 시간의 안전 확보 노력, 비상시 대응 노력, 재난 발생 이후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는 조치를 포함한 전략을 통해 달성 가능함

목 표	전 략	추진 과제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 조성	안전·안심 위해요인 저감	기반시설 안전성 확보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생활환경 규제 강화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Lifeline 긴급복구체계 구축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 대응력 강화
		피해지원 확대 및 조기 회복방안 강구
	안전한 배움터 확립	학교시설 안전관리 강화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재난안전교육 강화

전략 1. 안전·안심 위해요인 저감

(1)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의 지역특성상 시군과 읍면의 격차가 크고 자연환경도 상이함. 따라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인도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삶터와 일터, 배움터, 놀이터 등 안전생활터에서 도민들이 경험하는 주요 위해요인을 찾기 위한 방법을 정립해야 함

- 생활환경을 생활시설별로 구분하면 주거시설,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병원, 요양원, 마트, 시장, 영화관 등),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사현장, 기간시설(도로, 교량, 철도 등) 등이 있고, 각 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규제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안전·안심의 생활환경은 단순히 규제나 제도가 있고 이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님. 도민 스스로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이나 경험하는 위험 상황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변화시킬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생활환경에서 적용하는 규제와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통로를 개발한 후에 규제나 행정, 기술적 검토를 통해 반영하는 과정이 도입되어야 함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① 기반시설 안전성 확보

-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대형 주거시설 및 대형 공급처리 구조물 등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도민 차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형 재난을 대비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시설안전 상시점검 기준 및 제도, 대형 구조물 시설의 성능 개선 및 보강 기준과 제도의 마련, 관리 매뉴얼, 대형 재난 시 피난 등을 고려해야 함
-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함. 주민 대피시설이나 이재민 보호를 위한 시설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 도는 중추도시 생활권, 도농연계 생활권, 농어촌 생활권 등 다양한 생활권에 노출된 도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대형 시설물 및 사회 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물 및 작업장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도심 및 산업 지역에서의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기술을 개발해야 함

추진과제②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질병,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대형사고, 에너지 사고에 대한 지역 단위의 위험목록을 별도 작성·관리해야 함
- 우리 도에서 피해정도가 큰 사고 유형을 조사하여 계획단계, 설계단계, 확인단계 및 실행단계(PDCA)에서 예상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민원 해소를 통해 사고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거점 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백신 등 의료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거점 의료센터, 보건소, 민간 의료원 등의 정보공유 및 취약계층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대형 주거시설인 다중이용시설물 및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시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도민 차원의 신뢰성 확보 및 대형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함
- 중추도시 생활권, 도농연계 생활권, 농어촌 생활권 등 다양한 생활권에 노출된 도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함

추진과제③ 생활환경 안전규제 강화

- 현재의 안전 관련 규제와 규정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홍보하는 한편, 이에 대한 도민의 동의를 구하고, 일상생활환경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 환경, 자살 요인들을 찾아 안전 규제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단계에서 확인된 규제와 규정은 다음 단계의 도민의견과 비교하여 개정, 폐지, 신설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도민의견조사, 공청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위기, 위험상황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안전관련 규제 및 규정의 문제점

과 한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피상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해야 함

추진과제④ 폭력과 범죄로 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로 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그동안 폭력·범죄 예방 전략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의존해 왔으나, 지역사회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완성 가능함. ‘폭력과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 지역공동체’는 21세기 국가 사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 향후 이 같은 경향은 지속될 것임
- 지자체는 지역 내 폭력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① 범죄 위험 공간, ② 범죄 피해 취약집단, ③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④ 지역주민의 두려움 수준을 조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범죄 예방 전략은 범죄자들이 이성적 존재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지만 범죄자 중 일부는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며, 기계적 감시만으로 모든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주민의 책임감과 참여를 통해 기계적 감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함

전략 2.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힘과 민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재난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원 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재난에 강한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재난 피해자는 매년 36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재난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재난피해자를 위한 재난구호 체계 강화를 포함하여, 재난 발생 이전, 재난 발생 중, 재난 발생 이후 등 재난관리 전반에서 신속한 상황 반응과 생활 복귀를 위한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 미국은 2011년 9.11 테러 이후 월드 트레이드 센터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와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당뇨, 천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7만 1,000명을 지원한 사례가 있음. 일본도 비경제적 맞춤형 재난구호 서비스를 통해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① Lifeline 긴급복구체계 구축

-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같은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인 수도,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물류 등의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 도민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 유사시 전기·가스·수도 등 라이프라인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에 민간업자들과 ‘재난관리협정’을 맺어 재난이 발생하면 물자나 의료 지원, 긴급 수송지원, 이재민 수용장소 제공, 라이프 라인 복구 등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무상의 지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라이프라인 마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협요인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발굴하는 단계부터 시작하고, 재난 발생 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화, 백업, 로컬화 등 대비방안을 마련해야 함

추진과제②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 대응력 강화

- 재난에 노출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충격에서 벗어나 재난 이전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역 경제력도 회복될 수 있음

- 우리 도의 맞춤형 민관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복력 향상을 유도하고, 놀이시설이나 놀이 콘텐츠를 통해 우리 도의 안전 문화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한 재난 안전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제에 가까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기술도입을 통하여 훈련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함
-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적용한 재난 시뮬레이터 개발, 재난 체험 게임 기술 개발, 가족 체험형 대국민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현장 대응 조직을 위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충남 맞춤형 재난안전 콘텐츠 개발 등이 요구됨

추진과제③ 피해지원 확대 및 조기 회복방안 강구

- 현행 구호체계는 그 대상이 자연재해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원 항목도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됨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함
- 또한 구호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구호 약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재난 피해자의 성별, 장애유형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호가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재난 및 범죄 피해자 커뮤니티 회복력 향상을 위해 재난 피해자와 범죄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 회복 지원 센터를 마련하고, 우리 도에 적합한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재난피해 이후 지역사회 전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단순 피해 복구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목표 3]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음. 따라서 국민 일반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
-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안전이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자존감을 존중하는 것은 복지에서 강조되어야 함. 안전복지는 자선활동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정의의 실천 영역
- 안전복지는 생활환경에 잠재해있거나 내면적인 위험요소까지 해결하려는 예방적 복지이며, 사고발생 이후 치유와 자활지원 등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형태의 안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 복지임
- 저소득층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에 대한 경제적 대응능력도 부족하며 이는 저소득층의 추가적 계층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자활과 참여, 개인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관계맺기 등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전환되면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안전복지의 핵심임

목 표	전 략	추진 과제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 확대
		재난안전관리 정보수집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도민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안전정보 전달체계 마련
	수요자 중심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	도민의 안전요구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지역복지시스템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적 관계 복원을 통한 안전 확보

전략 1.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1) 필요성 및 목적

- 재난 발생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된 정보 등으로 인하여 위기가 증폭되거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 전달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원화된 홍보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언론 브리핑과 관련한 체계화된 매뉴얼이 없으며, 일원화된 언론창구도 없어 정부의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불신이 가중됨
- 최근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재난안전에 대한 관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재난안전취약계층은 여전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많은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재난안전 분야의 서비스 정보는 주로 다양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국가 정책의 개발과 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며 생활안전 분야의 정책개발과 국민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①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 확대

- 도민 누구나 안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산되어 관리되는 다양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과 공유가 가능해야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폭넓고 다양한 재난안전정보의 공개가 필요함
- 현재 부서별, 지역별로 안전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 정보공유 및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질의 재난안전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에 대한 재난안전 정보의 공개는 자치단체의 단순 정보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됨.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자료를 공급하고 공유해야 하고 복합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도민들이 위험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도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에 대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추진과제② 재난안전관리 정보 수집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 재난안전정보체계는 도민의 능동적 참여하에 구축함으로써 도민이 직접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이러한 도민 참여형 재난안전정보체계(망)의 목적은 지역적 위험으로부터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체계 구축(H/W) 및 달성하려는 요소들(S/W)임
- 주민재난안전정보망은 공공재로서 충남도 내의 위험에 대한 지역성과 주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실현하고 주민안전 최하한선을 보장하려는 것임
- 기존에는 중앙주도로 이루어졌던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과 주민 중심으로 그 주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함
-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국지적 공간정보가 우선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내의 재난안전정보를 통합하고 공간정보를 수집해야 함
- 지역의 재난안전 상황에 친숙한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재난안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민이 주도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

는 협력적 모델이 바람직함. 우리마을 재난안전지도 작성 워크숍 등 주민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해야 함

추진과제③ 도민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안전정보 전달체계 마련

- 도민의 접근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은 안전정보의 매체는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정보 매체를 개발해야 함
- 충남도민의 재난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재난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의 운영은 분산 처리되는 정보를 충남도가 모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충남도 및 도내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망으로 연결(linking)해주고 각 기관이 어떤 종류와 어떤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내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정보의 제공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모바일 기반 재난안전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에게 재난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웹/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이 가장 체감도와 접근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

전략 2. 수요자 중심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

(1)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인적·사회적 재난의 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음

- 서비스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안전서비스 수요자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지역별·개인별 속성 및 재난안전 체감 항목 정의를 통해 가구별 재난안전 유형을 확인함으로써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개인은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각기 다른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역시 개인별 상황에 맞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재난안전 관련 민원데이터나 SNS Buzz 분석 등에 의한 보다 세분화된 도민의 재난안전 니즈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도민 안전서비스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지금까지는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팽배해 있고 위험정보에 대한 소통이 부재함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등 국민 체감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① 도민 수요 맞춤형 지원

- 적극적 안전복지 지원체계의 구축은 적극적 안전 복지(positive safety welfare)가 사후적 재난 및 안전 대응에 대한 대안으로 안전 영역에서의 자율성과 개인적, 집단적 책임을 통한 사전적 안전 확보를 지원하려는 체계의 구축을 말함
- 지역의 안전수요 증가 및 도민의식 향상은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단체 및 기관, 의용소방대 등과 연계하여 안전복지가 필요한 이웃에게 맨투맨 안전복지 지원이 필요함
- 안전복지는 보편성에 입각하여 운영하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며, 특히 우리 도의 다양한 상황을 잘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 도는 타 지역에 비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심각성도 높음. 따라서 도민의식 향상에 따른 복지사회 구현

요구와 함께 안전 수요 증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 장애인, 고령자, 국내체류외국인, 여성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지역 내부에 권한이나 직책, 능력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과 작용이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주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안전복지 컨설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자살은 충동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으므로 고층 아파트 옥상이나 교량 등에 자살방지 문구를 넣거나 맹독성 농약 판매시 이를 주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담인력을 투입하여 자살위험에 놓이는 사람들의 마지막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추진과제② 지역복지시스템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하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민복지 기본선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안전이 최선의 복지라는 안전복지 기본선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복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복지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함. 부서별, 생애주기별, 대상별, 장소별, 유형별로 분산되어 있는 안전복지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재난약자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존에 마비되어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던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 안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재난 약자의 경우는 안전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재난안전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함께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고층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함
- 농산어촌이 많아 인구밀집도가 떨어지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낙후된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약자의 소외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방안을 시군단위에서 추진해야 함

전략 3.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

(1) 필요성 및 목적

-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은 매우 미흡함
-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을 야기하는 위험인자로부터 피해받기 쉽거나 받은 피해로부터 복구행위가 어려운 사람 또는 계층” (심기오, 2010: 9)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재난약자, 재해약자, 안전약자, 재난취약자, 재난취약계층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이은애, 2008; 심기오 외, 2010; 김윤희 외, 2012; 오금호 외, 2013)

표2-1. 국가별 재난취약계층의 기준

국가	용어	정의	대상
미국	vulnerable people susceptible to attack [재난(취)약자]	재해 대비·대응·복구에 있어 제공되는 기본 장비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육체적·정신적 장애인(시각·청각·인지·지체), 영어를 못하는 사람,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의학적·화학적 의존자, 집이 없는 부랑자, 신체적 허약자 및 어린이 등
일본	재해약자 [災害弱者]	위험관리능력, 정보입수·발언능력 및 행동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유아, 임산부 등
한국	재난약자 재난취약자 재난취약계층 안전약자 안전취약계층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	어린이,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 등

-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방재백서’ (內閣府, 1987)를 비롯한 각종 문헌에서 나타나기 시작함. 방재백서는 재난약자를 “재난 시에 일련의 행동을 함에 있어 핸디캡이 있는 사람 “으로 정의(Nemoto · Ariga, 2014: 3)하고 있음
- 미국은 재해 대비·대응·복구에 있어 제공되는 기본 장비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재난약자로 정의하고, 주요대상으로는 육체적·정신적 장애인(시각·청각·인지·지체), 영어를 못하는 사람,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의학적·화학적 의존자, 집이 없는 부랑자, 신체적 허약자 및 어린이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은 재난약자를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소방방재청, 2013)으로 정의하고, 그 주요 대상으로는 어린이,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 등이 됨
-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재난취약계층이 작은 것 하나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누리는」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
- 재난 시 보호가 요구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대피를 돕는 문화를 확산하고, 집단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대피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며,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재난안전 정보 제공에 주력해야 함
- 재난 복구 및 구호 시 여성을 고려한 인력, 시설 및 물자 확보와 지급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하며, 이주여성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①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안전은 기본, 최우선 가치’, ‘안전투자는 이익’ 등 안전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으나 안전은 기업이나 기관의 이익 보장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서 사고와 안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감시자인 도민, 그중에서도 안전에 취약한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행정기관은 안전에 대한 시책을 강화해야 하며, 고용주는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시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 안전에 대한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안전 투자에 따른 위험 저감 정도, 재해 감소 정도, 안전관리체계의 변화 등을 통해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도가 필요함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는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공급자 적합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추진과제② 사회적 관계복원을 통한 안전 확보

-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이들은 범죄의 위험, 재난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며, 여성이나 1인 가구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독거노인 증가는 고독사 및 노인 자살의 위험을 키움
- 우리 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노인인구, 거주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함
- 지역이 공동의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안전 확보에 중요하며,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 취약계층을 지역이 함께 돌보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복지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사회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시설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함. 도민의 주관적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 공유가 있어야 함
- 단순 물품지원이나 후원에서 벗어나 주민들과의 관계 복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실현함.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경제적 빈곤, 1인가구 등 고립과 우울 속에서 분노조절 장애 및 자살충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관계망 복원을 통해 해결함
-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을 타개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좋은 예로 공동부엌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 스스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마무리까지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립에 빠질 수 있는 주민들을 일상적인 사회관계망으로 이끌어낼 수 있음

[목표 4]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영

- 시스템이란 각 구성 주체들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전제 조건을 지님.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내 관련 부서와 모든 민간 자원이 질서 정연하게 작동해야 함. 안전행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시스템에 의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위한 선진적 운영이 필요함
-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도민이 지닌 위험 인식의 특성을 바탕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 소통은 일반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신뢰는 소통의 전제가 됨.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정부가 도민으로 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중앙과 지방, 정부와 도민의 인식 격차를 줄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목 표	전 략	추진 과제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영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 구현	안전자치 구현 방향 정립을 위한 법제도 구축
		자치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	동원자원 통합관리체계 및 공동활용시스템 마련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재난대응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재난안전 관련 계획 및 매뉴얼의 실효성 강화
		재난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재난안전 성과평가 및 결과활용체계 구축
		생활안전 골든타임 확보

전략 1.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 구현

(1) 필요성 및 목적

-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 재난관리체계와 지방 관련조직과의 연계성 부족에 따라 재난대응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선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명확한 역할 재정립 등이 필요함

- 재난 발생 시에 관련 기관 간 권한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명령체계의 혼선이 있음. 또한 중요한 점은 평상시의 역할 및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방서, 지방경찰청, 기타 유관기관들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이 어렵고 이들 기관은 자신의 고유 업무영역에 대한 간섭과 지시를 기피하기 때문에 협력체계 구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우리 도는 큰 틀에서 재난과 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 분산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안전자치의 구현은 충남의 재난 및 안전 현황에 적합한 개별 전문부서의 분산된 사전관리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위기상황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집중된 대응 네트워크 체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관에서의 관련 부서 및 인력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하여 명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현재의 위치를 분석하고, 기관의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부서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며, 재난안전 조직 및 인력의 위상 재정립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 확보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의 구현” 전략은 충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자치 구현방향 정립, 자치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함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① 안전자치 구현방향 정립을 위한 법제도 구축

- 현장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적 대비가 필요하며, 평상시 생활안전 및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방법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관리 역할을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는 재난발생 시의 긴급구조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통제단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의 대응활동에 대해서는 지역대책본부

지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 현장에서는 긴급구조 활동과 그 밖의 재난대응활동이 쉽게 구분되지 않을 우려가 높으므로 지휘체계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에서 지역대책본부와 지역통제단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함
- 자치단체 내 실질적인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통합이 정책대안임. 우리 도가 주도하여 통합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한 물리적인 공간 즉, 소방조직과 경찰조직, 그리고 중앙정부 조직 등이 상시적으로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대응통합센터(가칭 스마트 빅보드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임
- 경찰법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본격시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활용 가능한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효율적 배치와 운영을 준비하여야 함

추진과제② 자치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안전자치는 충남에서 재난과 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충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 분산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함. 안전자치의 구현은 충남에 재난 및 안전 현황에 적합한 개별 전문부서의 분산된 사전관리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위기상황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집중된 대응 네트워크 체계로 이루어져야 함
- 안전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재난안전 기관들과의 단일기관적 수직적 협력 및 지원체계는 효과적이지 않고 불가능함. 이에 지방정부 중심의 현장 공조 및 협업체계 구축, 수평적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중앙정부는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신뢰관계가 우선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재난에 관한 초동 대응기관은 지방정부로 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조정의 업무를 수행함. 지방정부는 재난발생 시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준에서 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 재난대응기관들은 자신의 고유영역을 고집하며 간섭과 지시를 기피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지방의 재난안전 업무협력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평상시의 협력 체계가 재난발생 시에 작동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갖추고 이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함
- 이는 지방정부의 조직진단과 관련기관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관련업무 및 기능의 연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동원 자원(인적, 물적, 시간적)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 자원동원 네트워크 체계를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함
- 공공부문의 업무적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민간의 전문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동원 및 활용 체계를 갖추어야 함.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는 행정역량 강화와 민간부문의 적극적 협력 역량 강화의 두 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전략 2.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

(1) 필요성 및 목적

- 지자체, 소방, 해경 등 각 분야별로 독립된 재난현장 지휘체계 및 재난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통합지휘체계가 미흡하여 현장대응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재난의 확대 단계별로 현장에 투입되는 실무반을 사전에 규정하지 않아 돌발 상황에서 현장대응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으며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재난대응 물자, 장비, 인력 등이 현장에 제공되어 자원이 부적절하게 제공되거나 낭비되는 실정임
- 전문성 확보는 재난안전 경력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유관 조직과 업무를 반영한 경력지도를 구체화해야 하며, 경력지도에 의한 배치와 필요한 직무역량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재난수습에 필요한 동원자원 관리, 재난유형별 전문가 지원, 재난현장 수습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동원과 관리가 요구됨

- 재난구호 및 복구를 위한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응급조치의 지연이 발생함
- 언론의 건전한 역할이 필수적임. 재해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과 재난발생시의 복구 지원, 재난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 등에 있어서 언론의 참여의지를 확대하여야 함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① 동원자원 통합관리체계 및 공동활용시스템 마련

- 재난대응 동원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자원을 장비, 자재, 인력 등의 분야로 분류하고, 재난유형별로 핵심자원·특수자원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각 공공·민간기관과 단체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연계·통합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공공활용시스템은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산을 위한 기능을 포함함
-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유형별로 필요한 지식·판단·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악하고, 이들을 관리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 재난유형별 전문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재난유형과 규모별로 필요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민간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교육·훈련하는 민간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추진과제②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 공공영역에 재난을 비롯한 각종 대형사고와 같은 다양한 위기발생 가능성이 커짐. 도민들은 자연재난 보다 개인이 대비하기 어려운 사고에 주목하고, 안전사고 이면의 배경에 특히 관심을 갖게됨

- 사고발생 경위가 사회문제와 결부될 경우 부정적 여론 형성의 가능성이 커지며, 위기 자체가 가져오는 위협보다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된 정보 등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인한 위기의 증폭과 사회적 갈등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함으로써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2차적인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도민의 안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및 각종 사고 상황을 대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을 위하여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 범위, 내용을 정립하고, 국내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사례, 우리의 현황 및 실태 분석을 실시함

추진과제③ 재난대응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 현재의 분산적 안전관리 운영체계 하에서는 기획 및 조정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관련 부서와 산하 기관과의 상호 협력이나 협의·조정 필요성이 낮음. 이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시책과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 예산 낭비 및 업무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내포함
-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총괄부서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의 공유 및 표준화, 부서간 실질적 의사소통과 협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경찰청, 교육청, 군부대 등 대외기관들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위하여 정례적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이밖에도 실무자들의 수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함
- 국제적인 교류 협력은 활성화되지 않은 영역이지만,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와 감염병 등 재난관리 환경이 국제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을 피하기 어려우며, 우리 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장기적으로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 안전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
- 중앙정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약체결 및 공동사업 추진, 재난대응 합동훈련 방안을 마련

-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관련 국제 행사를 개최 또는 참여하여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기후환경이나 재난특성에 맞는 선진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전략 3. 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1) 필요성 및 목적

- 재난안전을 위한 계획은 세부적인 투자 우선순위와 자원조달, 전 과정에서의 성과 착안점 등이 명확해야 함. 그러나 현재의 계획 및 매뉴얼은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제적 가이드가 될 수 있는 활동의 구체화가 미흡함. 이는 성과지표의 측정요소와 측정방법의 구체화로 보완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련 행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난 관리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집행 또한 제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많은 한계와 새로운 위기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난안전 행정에 관한 주민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음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고 재난에 의한 피해수준과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동일한 역할과 기능, 재해복구 및 보상 등 중요시하는 현재의 재난안전시스템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시스템은 지역현실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재논의와 재정립이 필요함
- 지방정부에서는 부서별 중복된 예산낭비 우려가 존재하고, 재난예방에 대한 예산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시에 재난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예산은 신규사업 예산으로 간주되어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주로 복구예산 중심으로 전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예산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계획과 매뉴얼 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

는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임. 이는 실제 계획만 존재하고 평가와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① 재난안전 관련계획 및 매뉴얼의 실효성 강화

- 지역현실을 반영한 중앙-지방, 지방정부 조직 내, 지방정부-협력기관, 공공부문-민간부문, 또한 상호 교차적 네트워크 방식의 재난안전계획 수립을 통한 실행 가능성 확보가 필요함
- 실제로 재난안전계획의 구체성과 표준화된 대응매뉴얼이 부족한 경우 초기대응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마련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집행 노력이 필요함
- 사전 협의된 많은 계획들이 재난대응에 활용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통일화되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과 매뉴얼을 수립해야 함
- 우리 도의 재난안전 계획 수립은 내부 부서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이 작성한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론 및 실무 전문가를 활용하여 충남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실제 계획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중심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수요자는 매뉴얼 활용의 대상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주민이 될 수도 있음
- 수요자 중심의 현장중심 안전관리 계획은 용어의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시작하여, 지역의 지리적 정보, 지역 재난관련 특성, 재난관리 단계별 수행 활동 시나리오 등이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되어 있어야 함

추진과제② 재난정보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 초동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상황을 분석·판단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시에 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재난 및 업무 영역에 따라 분산된 재난관리체계에서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을 공유하고 표준화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과 저비용의 전파망 구축이 필요함
- CCTV, 센서 등 첨단 ICT 장비를 통한 정확한 재난정보 수집하고, Big Data 재난상황 수집·저장·분석을 통해 재난을 예측하며 지상파·지역유선방송, IPTV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야 함
- 현재 분산된 재난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플랫폼(Smart Screen)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상황실과 현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함
- 재난안전 포털을 통한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과 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재난관리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됨. 다양하고 정확한 지식정보는 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함. 또한 유관기관과의 상호 지식공유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임
- 재난관리 초동대처에 있어서 관련 정보의 부정확성 및 왜곡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즉 재난시설정보와 인력, 기술, 장비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에 활용해야 함
- 예방단계에서의 재난정보는 주민들에게 재난의 위험성과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
- 구축된 재난 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언론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함. 문제점을 지적하는 고유기능과 함께 재난의 예방과 대응책을 홍보하고, 나아가 언론기관에서 수행한 과학적, 객관적 규명 내용을 지식으로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재난 정보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 상호협력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추진과제③ 재난안전 성과평가 및 결과활용체계 구축

- 성과는 조직의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산출하였는가에 대한 기관의 핵심활동의 산출 또는 결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재난안전 성과평가는 관련된 목표를 유관 활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임
- 재난안전의 성과관리체계는 조직업무평가, 자원의 합리적 배분, 구성원의 동의와 공감, 조직의 방향성 제고, 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 구성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략중심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업무성과의 개선하는 기본적 성과관리 목표달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과관리의 기반인 전략기획(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구성 중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신뢰성 확보에 있음
- 성과지표의 명확한 설정, 성과달성을 위한 활동의 측정방법 구체화가 우선되어야 함. 또한 유용한 정보에 의한 측정값의 활용가능성, 전체 업무 활동 반영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부 성과산출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난안전 행정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추진과제④ 생활안전 골든타임 확보

- 비상시 골든타임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구조 시간을 확보해야 함
- 시설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법은 있으나 지원이 미비한 경우를 발굴하고, 일상적인 상황(비 응급상황)에서 기초질서 및 규정준수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 골든타임 저해 요인을 사고 유형별로 발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초기 대피요령과 응급 구조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조기 발견과 상황전파를 위한 역량 강화,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과 인명 구조 활동, 응급의료소 운영, 광역 출동 및 지원기관 현장 활동 순으로 진행
- 이를 위해 대응기술 및 인프라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신종 및 복합재난을 대

비한 전문가 모임을 구성하여 대비해야 함

- 응급대응 훈련이 관계기관 상호간 통합적 대응 형태로 이루어지고 구급대응훈련의 추세가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긴급구조통제단 출동체계 가동 및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으로 이루어짐. 이를 통해 구급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현장지휘소와 현장응급 의료소 간 지휘·보고체계 확립, 유관·단체 기관간의 임무의 적절성, 이송환자 현황 등에 대한 SNS단체 카톡방 공유 현황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
- 응급환자 구명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복지부는 닥터 앰블런스와 이동형 병원 등을 기술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를 우리 도와 연계하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피해자 위치정보 조회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인명구조와 관련된 우수 자원을 모집하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목표 5]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에서부터 안전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정부, 시장, 시민 단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할 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임
- 지역의 안전거버넌스 구축은 스스로의 주체적 역량을 키우고 토론과 합의를 추구하는 문화적 성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행정기관은 거버넌스의 구동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실시해야 함

목 표	전 략	추진 과제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도민주도형 안전활동 영역확대	지율형 도민 안전모임 활성화
		리더 안전역량 강화
	다양한 형태의 안전 네트워크 구성	생활안전 협의체 구성
		주민 주도 안전마을 육성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	지역공동체 맞춤형 안전거버넌스 모형 개발 협치를 위한 주민자치조직 활용

전략 1. 도민주도형 안전활동영역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네트워크는 물론 그 구성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기능적, 영역적 범위를 확장하고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안전거버넌스의 경우, 정부부문 주도 방식이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태생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시민주도형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한 상향식 시민안전공동체 구축으로 안전거버넌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안전거버넌스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안전협의체 구성이 필요한데, 안전 관련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

해서는 지역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안전거버넌스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본의 공조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시민이 주도가 되어 안전마을 만들기과 같이 주민밀착형 생활안전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시민 참여 활성화와 운영의 정례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안전진단 정례화 모델 개발이 요구됨
- 이를 통해서, 하향식 안전 협의체 구성이 아닌 시민 주도의 방식의 시민안전공동체구성과, 안전거버넌스 활동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네트워크의 기본 속성인 확장성이 강화되고 참여와 교류도 활성화 되어 활발한 안전거버넌스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음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① 자율형 도민 안전모임 활성화

- 도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사회 안전공동체를 도민 친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민 자율에 기초한 생활 속 안전문화를 실현해야 함
- 도민 안전모임은 지역사회의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임. 충청남도 안전은 ‘스스로 안전, 나부터 안전, 이웃을 위한 안전’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안전모임을 개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에서 시간적·공간적 지원을 통해 도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함
- 자율형 도민 안전모임은 지역 주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나아가 사업장 안전모임, 산악회 안전모임, 학교운영위원 안전모임, 경로당 안전모임 등 직종 및 연령별로 안전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방법을 개선하고 선순환적 안전신고시스템을 정착하는 한편, 신고사항을 데이터화 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함

추진과제③ 리더 안전역량 강화

-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어느 계층에 대한 교육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조직 내 리더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이를 해당 기관의 하부조직으로 파급하는 교육방식이 바람직함
- 지역, 업종, 공동체 등 각 분야 대표자를 소그룹화 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교육을 우선 실시함. 안전리더가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접 안전 교육 및 활동을 주도하게 하고, 참여도 제고를 위해 안전리더 교육 실시 및 수료 대상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 대상과 직능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과정 예산을 편성 지원함

전략 2. 다양한 형태의 안전네트워크 구성

(1)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안전거버넌스가 연령과 문화 등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 일부 중복성과 비효율의 측면이 있음
- 기존 조직들을 대상으로 세대와 문화 및 계층을 고려한 생활안전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자와 민간부문 등 협력체계로 활용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 다양한 안전관리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① 생활안전 협의체 구성

- 생활안전협의체는 기존의 다양한 지역사회 방재관련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대안조직으로써 생활권 단위의 안전활동을 위한 기존 조직 및 민관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도민 주도형의 기구로 구성

- 마을 또는 동 단위의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 발생시 이를 중심으로 맞춤형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생활권 단위의 안전활동과 홍보를 통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 함
- 지역공동체 또는 생활공동체에서 안전거버넌스의 토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차이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구성원 간 상호 협동과 학습 그리고 선의의 경쟁 구도가 필요함
- 주민밀착형 생활안전네트워크는 첫째, 정부와 민간지원주체가 중심적 역할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고, 둘째,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셋째, 지역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의 최종적인 책임자이나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협력·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지방교육청, 지방경찰청을 비롯한 행정 관계기관의 협력을 연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생활안전 협의체의 구성단위는 마을 또는 동 단위의 생활권 단위가 되며, 구성원은 주민, 단체, 활동가, 학교, 병원, 치안센터 등이며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발생시 복구활동을 지원함

추진과제② 주민주도 안전마을 육성

- 지역 공동체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경제공동체(마을기업, 정보화마을 등), 생활공동체(희망마을, 주민자치회 등), 사회공동체(새마을 운동 지역 공동체 사업, 새마을 금고 지역공헌 사업 등) 등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음. 이에 재난안전 공동체(안심마을 등)의 새로운 구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재난극복을 위한 지역별 취약성 발견과 지원이 가능함
- 안전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영유아, 여성 등)과 안전사각지대, 재난취약 구조물 밀집지역 등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개발하여 도정에 반영해야 함. 재난 징후로 인한 사전 점검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조례 입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재난취약시설 안전지도 구축 및 운영. 이를 통한 안전점검, 점검반영 또는 점

검문제 이력 등을 종합적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충남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해야 함. 재난안전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구축하여 위험에 대한 사전인지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지역 자율 협력체계 구축해야 함

- 지역별로 취약성을 스스로 발견하여 주민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주민사업으로 연계해야 함. 충남의 재난안전 지역 공동체 복원 및 형성에 관한 연구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마련되어야 함
- 내 지역의 생활 안전을 위한 생활 안전 민원을 취합하기 위한 투자 필요. 충청남도 학교 재난 취약성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지킴이 인력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또한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이 스마트 안전 귀가를 위한 실시간 정보 플랫폼 구축하여 주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주민 안전망 운영
- 문화재 안심 공동체, 산림해양 안심 공동체와 같이 재난유관기관 상시적 협의체 구성하여 안전점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하고 비치해야 함. 관련 관리자 및 해설사 등의 모의훈련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유도
-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병행(안전교육, 예방, 안전산업 등), 입상작은 지역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으로 연계하여, 선정된 제안자가 안전정책 입안자로 이력 관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참여를 유도

전략 3.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

(1)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도의 경우 권역별로 재난 발생 유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군별로 획일적인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천안, 아산 등의 북부 도심권역의 경우 화재 등 도시형 재난 발생 빈도가 높고,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등의 서해 해안권역은 해양 재난의 발생 빈

도가 높으며, 청양, 부여,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등 내륙 동남권의 경우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특히 태풍, 홍수 등 풍수해 피해가 많음

- 따라서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한 안전거버넌스 모델 개발이나 거버넌스 작동을 위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재난안전 훈련 프로그램 발굴과 안전거버넌스 활동 지원이 요구됨
- 우리 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형과 농촌형의 두 트랙 안전거버넌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데, 철저하게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여 운영과 성과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역 내 기존의 형식적인 안전네트워크가 보다 실행력을 갖추고 실질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주민자치조직을 활용함

(2) 추진과제 및 방향

추진과제① 지역공동체 맞춤형 안전거버넌스 모형 개발

- 공동체의 유형과 규모, 안전 및 재난 서비스의 특성과 수요 유형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전거버넌스 모형을 개발해서 제공함으로써 자율성과 작동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수요자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참여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거버넌스 조직의 생명력인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함
- 따라서 안전충남 비전이 지향하는 안전 취약계층 또는 안전 약자들을 우선한다는 의미와, 주민이 자치행정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PROSUMER(생산자+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의 자원을 투입하고 융합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시형과 농촌형 등 다양한 안전거버넌스 모델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에 따라 자율성, 전문성 및 책임성을 부여는 물론 활동 공간과 연건 등을 조성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도시·농촌별/ 시장/ 산업 등 참여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음

- 안전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영유아, 여성 등)과 안전사각지대, 재난취약 구조물 밀집지역 등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도정에 반영해야 함. 재난 징후로 인한 사전 점검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조례 입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추진과제② 협치를 위한 주민자치조직 활용

- 협치를 통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안전정책 전 영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기획하며 집행과 평가를 함께 공유함. 도민 안전 확보에 있어서 실질적 시민 생활 향상을 위해 상존하는 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형 협치를 실현하기 위함
- 지역주민과 시장 군수, 행정부서,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촉매역할을 담당하고,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 정도에 따라 협치의 한 축으로서 도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로서 주민자치조직을 활용함
- 지역공동체 기반이 미약한 경우에는 주민모임을 활성화 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 안전 리더를 발굴·육성, 안전 위해요인을 조사·발굴하는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주민 중심의 자율적 참여와 안전 관련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함